

-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의 정 토 론 회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의 정 토 론 회

I 토론회 개요

- 일 시: 2023. 10. 13.(금) 14:00~16:00
- 장 소: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303호
- 주 제: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주 최: 충청남도의회(신청자 :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위원)
- 참석인원: 100여 명(도의원, 학계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II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자
14:05~14:15	10'	내빈소개·개회사 및 축사	좌 장 ※ 개회식 후 기념촬영 이후 토론회 진행
< 토 론 회 >			※ 진행 : 좌 장
14:15~14:45	30'	주 제 발 표	발제자
14:45~15:25	40'	지 정 토 론	토론자 5명(각 8분)
15:25~15:40	15'	자 유 토 론	발제자, 토론자
15:40~15:55	15'	청 증 토 론	참여자 전체
15:55~16:00	5'	정 리 및 폐 회	좌 장

발 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NLP연구소 대표
김 봉 환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 방법	4
1) 연구 수행체계	5
III.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 교육현황 및 인식도 조사	5
1.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수강 현황	5
2.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 실태조사	6
1) 설문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6
2) 충청남도의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교육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7
3)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 도비 지원 및 교육 현황	10
4)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11
5)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15
IV. 결론 및 제언	24
1. 결론	24
2. 정책제언	26

〈표차례〉

〈표 1〉 연구 수행체계	5
---------------------	---

〈그림차례〉

〈그림 1〉 설문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7
〈그림 2〉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참가 현황	7
〈그림 3〉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이수현황	8
〈그림 4〉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중간 포기 이유	8
〈그림 5〉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만족도 현황	9
〈그림 6〉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시간 만족도 현황	9
〈그림 7〉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불참 이유 현황	10
〈그림 8〉 시·군 주민자치 교육 참가 현황	11
〈그림 9〉 시·군 주민자치 교육시간 참가 현황	12
〈그림 10〉 시·군 주민자치 교육시간 만족도 현황	12
〈그림 11〉 시·군 주민자치 교육 만족도 현황	13
〈그림 12〉 시·군 주민자치 교육 불만족 현황	13
〈그림 13〉 시·군 주민자치 교육 불참 이유 현황	14
〈그림 14〉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횟수 현황	15
〈그림 15〉 읍·면·동 1회 역량강화교육시간 현황	16
〈그림 16〉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시간 만족도 현황	16
〈그림 17〉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강사 선정 현황	17
〈그림 18〉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불참자 보수교육 현황	17
〈그림 19〉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현황	18
〈그림 20〉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불만족 현황	18

<그림 21>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이 주민자치사업 및 활동에 대한 이해 현황	19
<그림 22>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이 주민총회 실천에 도움 현황	19
<그림 23>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활동 정보제공 현황	20
<그림 24>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은 리더 활동에 도움 현황	20
<그림 25>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이 지역 활동가로서 자긍심 현황	21
<그림 26>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미 참가 이유 현황	21
<그림 27>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필요한 교육내용 현황	22
<그림 28>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원하는 교육형식 현황	22
<그림 29>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에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현황 ..	2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되었고, 이후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지방자치 분권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수정 발의되면서 특별법 제27조(설치), 28조(기능), 29조(구성)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읍·면·동(2019년 기준, 3,491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충청남도 또한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하였고, 2017년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8년부터 충청남도의 시·군, 읍·면·동을 대상으로 충남형이란 이름으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충청남도의 시·군 자치단체 또한 각 시·군의 이름을 딴 ○○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독립적으로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충남 형과 각 시·군 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외형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민자치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분권의 기본법을 기준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함당하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 분권법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출범은 주민이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법적 제도적 한계점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권한보다 의무감과 책임감만 주어져 주민자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 그럼에도 불

1) 전상직, 한국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천안시대「천안형주민자치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2022,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정책토론)

구하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가치라는 맥락에서 주민으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주권자로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회혁신과제인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이란 국정 정책을 받아들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2017-9-20, 제4280호를 공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충남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를 만들고자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 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2조(정의)에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 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지원)에는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4항에 도민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²⁾ 특히 2018년 도정 과제로 “읍·면·동 지방 민주주의의 숙성을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³⁾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의무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고 교육커리큘럼에 맞는 유형별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포럼 등을 적극 지원·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의 리더로 충분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도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역량)에 따라 지방분권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지원조례의 지침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그린자치로써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과업 중 하나다. 지역과 마을을 위한 자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은 지역과 마을의

2)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3)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료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지역과 마을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조했다고 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 교육 가이드북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마련한 기본교육과 역량 강화교육이 충청남도 주민자치현장에서 얼마만큼 실행에 옮겨졌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주민자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군 또한 읍·면·동에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 도비와 시·군의 시·군비가 투입된 교육정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은 충청남도 주민자치 교육의 선진화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그린 자치역량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와 시·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의 현황과 인식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자치 교육의 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충청남도 주민자치 교육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기본교육, 역량강화교육)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해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참가 여부와 교육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시행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무교육, 역량 강화교육)의 참가 여부와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충청남도 시·군의 읍·면·동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역량 강화교육)의 참가 여부와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위 사항들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충청남도 주민자치 교육의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번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2023년 8월 10~25일까지 모바일(SNS) 설문과 설문지를 통하여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수강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고,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 추진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자치행정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1) 연구 수행체계

이번 연구는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수강 현황자료,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현황자료, 설문을 통하여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충청남도의 시·군 읍·면·동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개선점과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교육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수행체계

연구의 흐름도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범위 • 연구 방법	
제2장	• 충청남도 온라인주민자치학교 수강 현황 분석 • 충청남도 온라인주민자치학교 교육 현황 분석 •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 도비 지원 현황 •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현황 분석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현황 분석	자료조사 설문조사
제3장	결론 및 제언	

Ⅲ.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현황 및 인식도 조사

1.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수강 현황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학교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쉽게도 매년 실시되었던 상설 주민자치학교의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2022년~2023년 2년간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수료자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제공받은 자료는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원을 구분할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인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충청남도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온라인교육 수료자는 1,277명, 미수료자 172명(중도 포기자), 모두 포함한 1,449명만이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충청남도의 주민자치(위원회)회 위원은 총 5,834명이었고 이 중 1,277명만이 온라인교육을 수료하였다. 21.8 %만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을

수료한 것이다. 위의 5,834명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두 합한 인원이며 이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2022년 기준 3,500명이었다.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의 수료자 자료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만약 3,50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1,277명이 온라인교육을 수료했다고 하여도 36.4%만이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것이 된다. 이 자료대로라면 2022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교육은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다. 2023년 상반기 8월까지 온라인으로 주민자치학교 이수자는 1,706명, 미수료자 216명(중도 포기자), 모두 포함한 1,922명이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충청남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총 6,715명이었고 이 중 1,706명만이 온라인교육을 수료한 것이다. 25.4%만이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을 수료한 셈이다. 위의 6,715명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두 합한 인원이며 이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2023년 기준 5,252명이었다. 주민자치회 위원 5,252명 중 1,706명이 온라인교육을 수료했다고 한다면 32.4%만이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것이 된다.⁴⁾ 2023년 또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교육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이 된다. 단 아직 상반기의 자료로 참여율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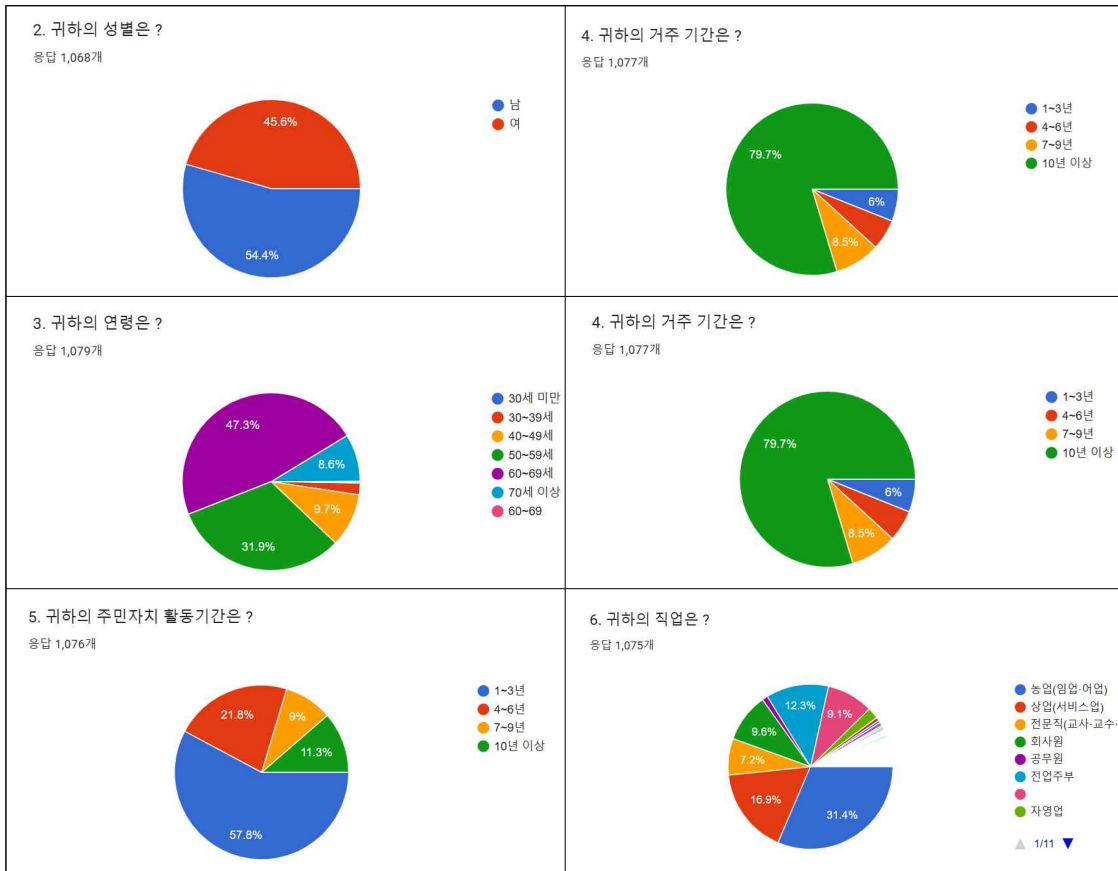
1) 설문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이번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15개 시·군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모바일(SNS) 설문과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위원은 모두 1,096명이었고, 2023년 기준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 총인원 6,715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16.3%만이 설문에 참여한 것이다.

연구 목적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위원 54.3%, 여자위원은 45.7%로 남자위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은 60대가 47.3%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2%, 40대가 9.8%, 70대가 8.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이 79.7%로 가장 많았고, 7~9년이 8.5%, 나머지는 6년 이하로 거주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 활동기간은 1~3년이 57.8%로 가장 많았고, 4~6년이 21.9%로, 7~9년이 8.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31.5%, 상업 16.7%, 전업주부 12.3%, 자영업 9.6%, 전문직 7.2% 순으로 나타났다.

4)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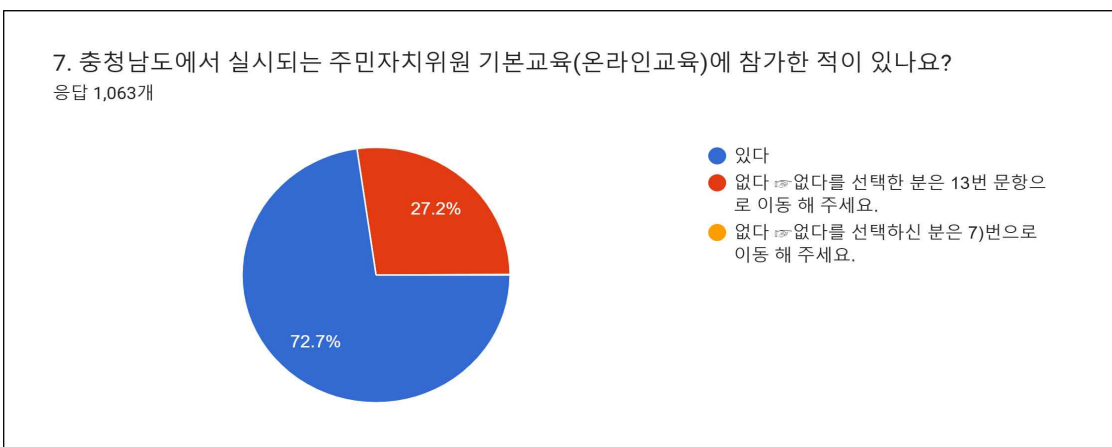
<그림 1> 설문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충청남도의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교육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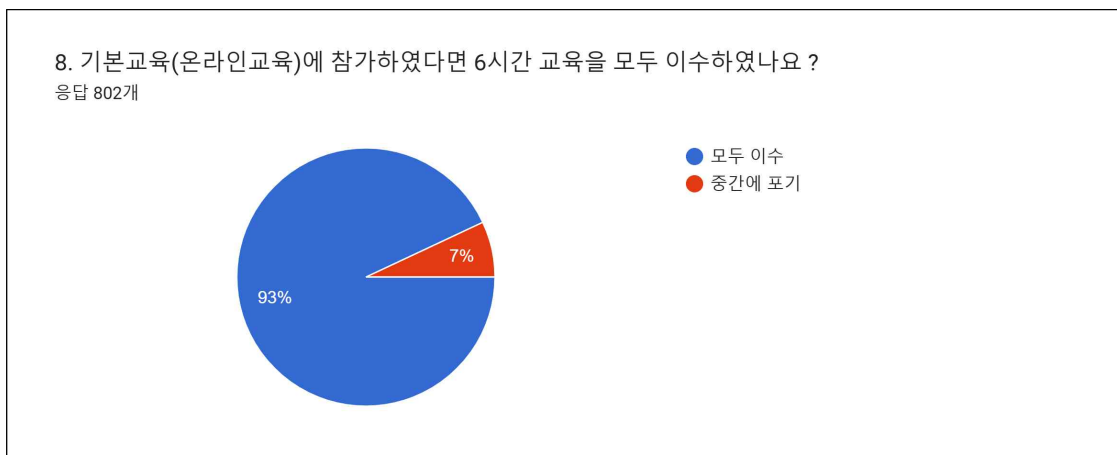
• 교육 참가 현황에 대한 인식에서 온라인 주민자치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63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72.7%가 온라인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7.2%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참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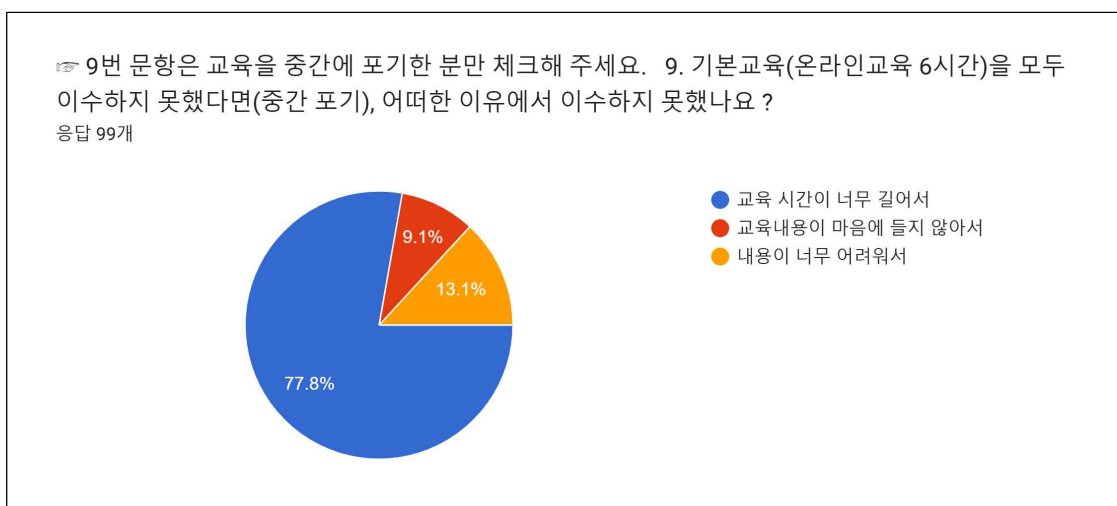


- 온라인교육에 참여하였다면 6시간을 모두 이수하였는가라는 질문에 93%가 모두 이수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중 7%는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에 포기한 이유로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 77.8%,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13.1%,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9.1%로 나타났다. 교육 시간에 대한 문제와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주민자치 교육 설계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림 3>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이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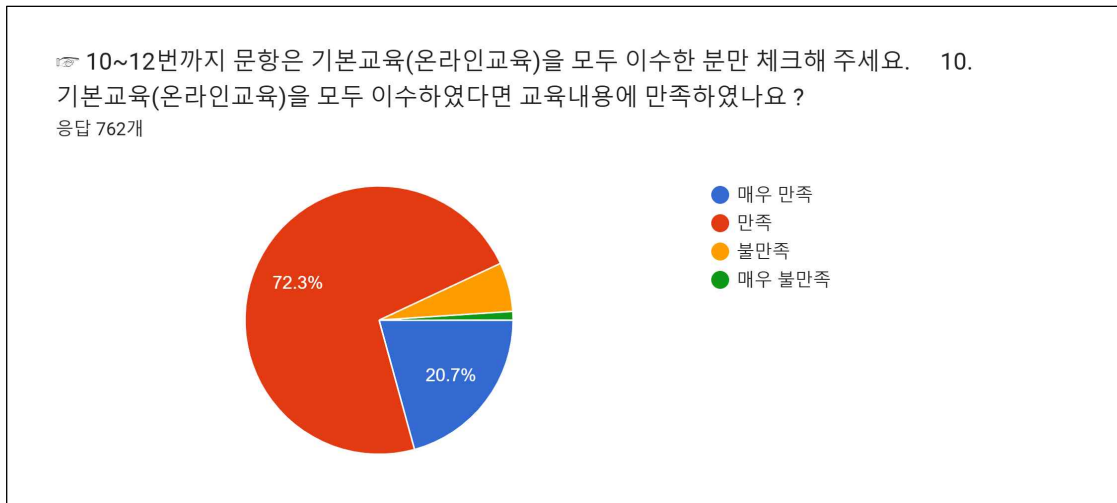


<그림 4>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중간 포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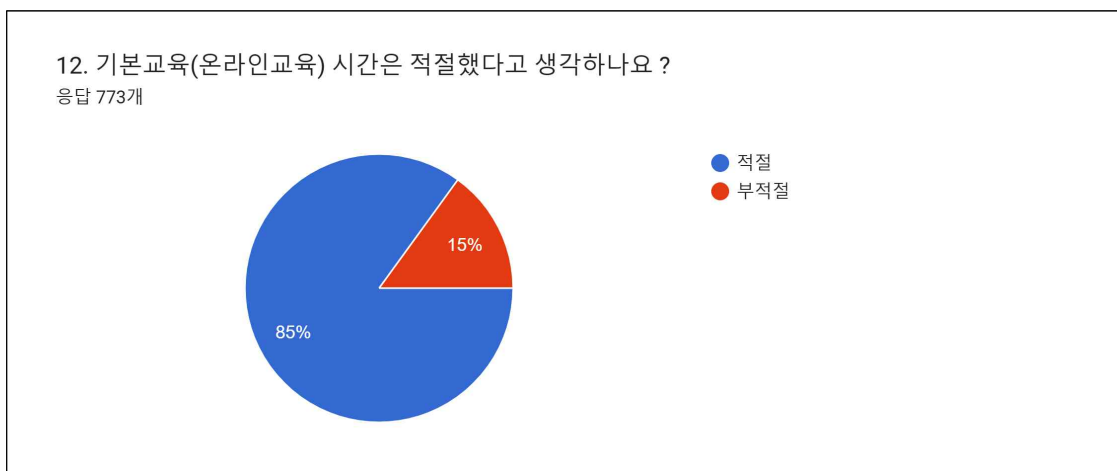


- 온라인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교육내용에 만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93%가 교육내용에 만족감을 나타내었고, 교육 시간을 묻는 질문에 85%는 교육 시간이 적절하였다고 하였다.

<그림 5>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만족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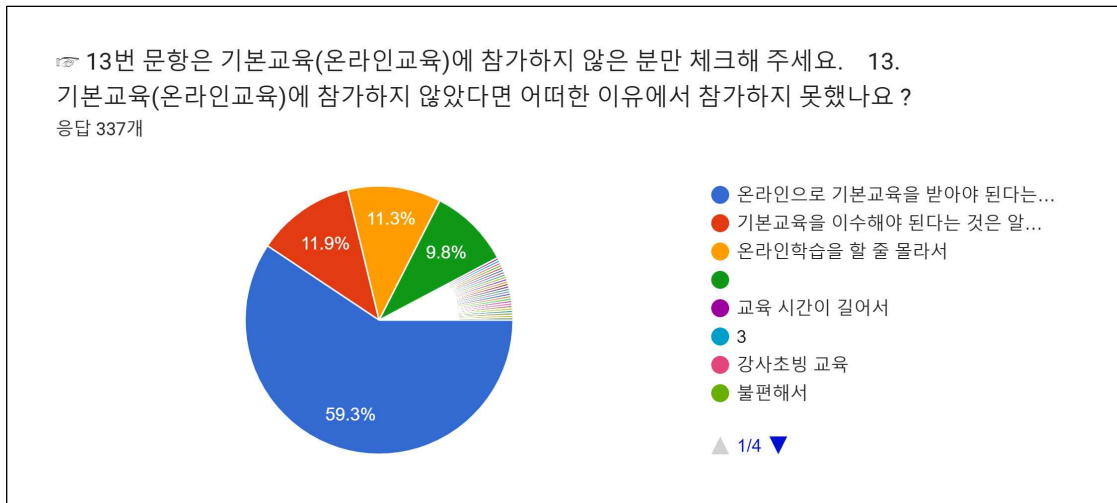


<그림 6>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시간 만족도 현황



- 온라인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가 59.3%, 기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1.9%,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줄 몰라서가 9.8%나 되었다.

<그림 7>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불참 이유 현황



위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주민자치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은 위원의 93%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시간도 응답자의 85%가 적절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인원 중 2022년 21.8%(주민자치회 위원 36.4%), 2023년 25.4%(주민자치회 위원 32.4%)만이 주민자치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 결과는 연령과 직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령을 살펴보면 50세~59세가 32%, 60~69세 47.3%로, 두 연령층을 합하면 79.3%로 연령대가 높았으며 70세 이상도 8.5%로 대체로 주민자치위원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을 보면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31.5%, 상업 16.7%, 전업주부 12.3%, 자영업 9.6% 등, 전문직 직업이 아닌 직업군의 종사자가 높았다. 이것은 온라인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 때와 직업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방법을 더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 도비 지원 및 교육 현황

시·군의 아카데미교육을 위한 충청남도의 예산지원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을 위하여 137,700,000원을 15개 시·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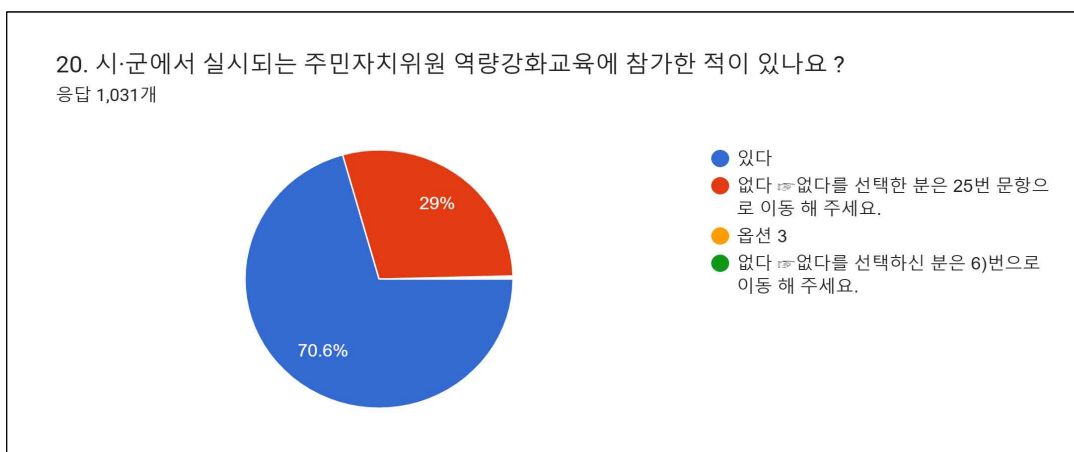
지원하였고, 이 중 125,620,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22년 시·군의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 총 이수자는 2,946명 이었다. 충청남도 총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5,834명 중 2,946명이 수료하여 50.4%가 수료한 것이다. 아카데미교육 운영 방법은 자체적으로 운영한 시·군 4개, 위탁운영 시·군 11개로 나타나 있다. 2023년에도 시·군에 137,700,000원을 지원하였고, 8월까지 2,644명이 수료하였다.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6,715명 중 2,644명이 수료하여 39.3%가 수료한 것이다.⁵⁾ 아카데미교육 운영 방법은 2022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에서 주민자치 교육을 위한 사업비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0.4%, 2023년 8월까지 39.3%만이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교육비 지원이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현실적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4)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충청남도 시·군에서 주민자치 교육(사전교육, 역량 강화교육, 충남형주민자치 컨설팅)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주민자치아카데미란 교육의 틀 안에서 주민자치 교육 현황 및 인식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0.6%가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29%는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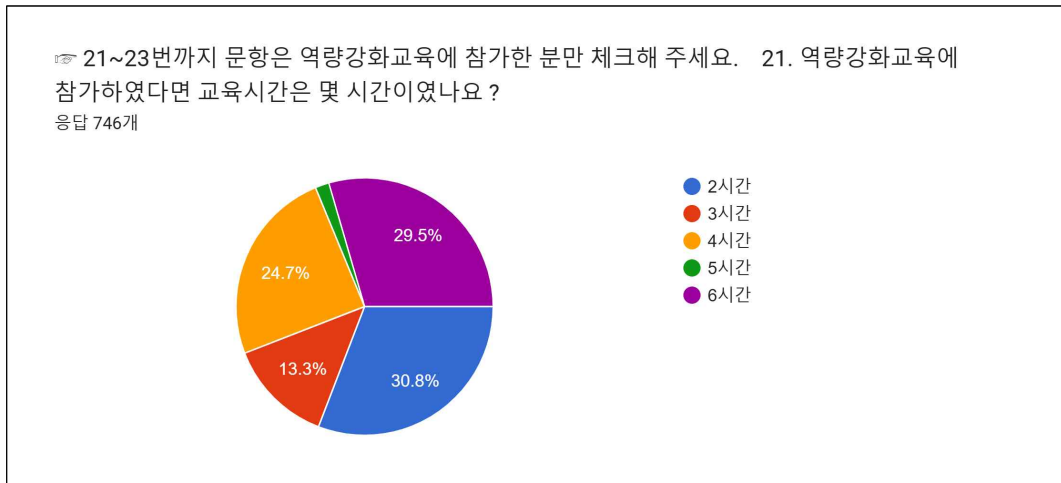
<그림 8> 시·군 주민자치 교육 참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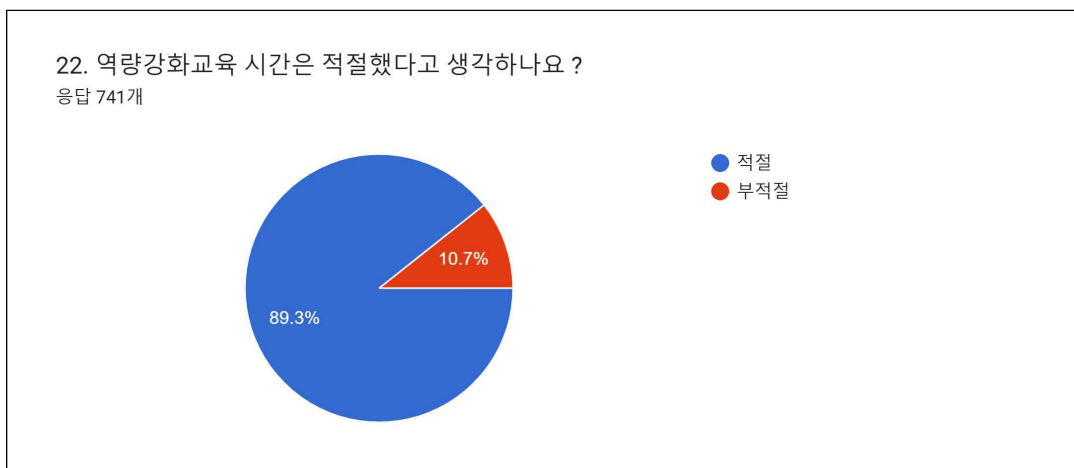
5)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료

- 교육 시간을 묻는 질문에 2시간이 30.8%, 6시간이 29.5%, 4시간이 24.7%, 3시간이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시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89.3%가 교육 시간이 적절했다고 답하였다. 교육 시간은 2~6시간까지 교육내용 및 교육 환경에 따라 적절히 잘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9> 시·군 주민자치 교육시간 참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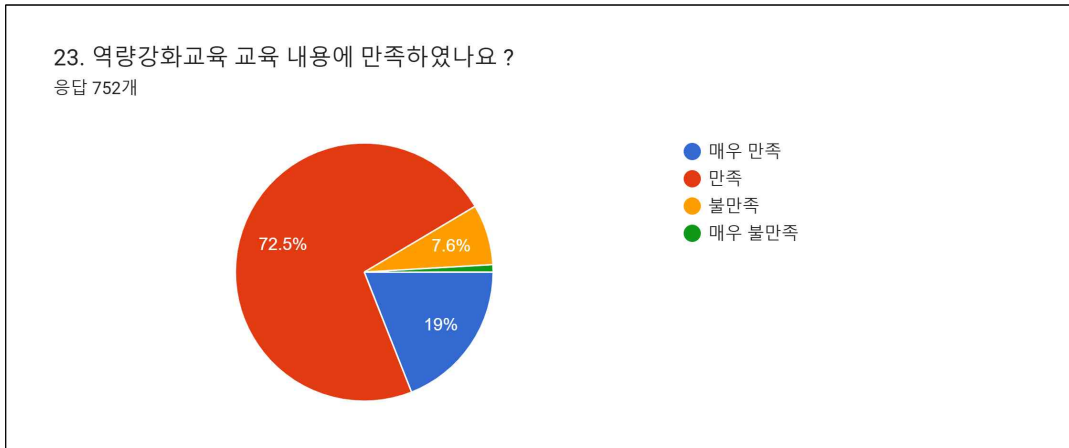


<그림 10> 시·군 주민자치 교육시간 만족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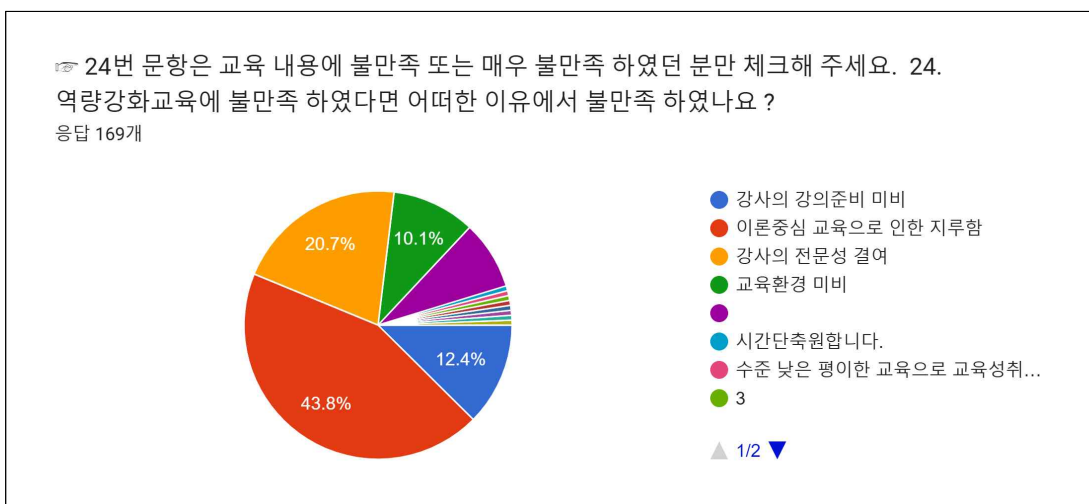
- 교육내용을 묻는 질문에 91.5%가 교육내용에 만족하였으며 7.6%로만이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시·군 주민자치 교육 만족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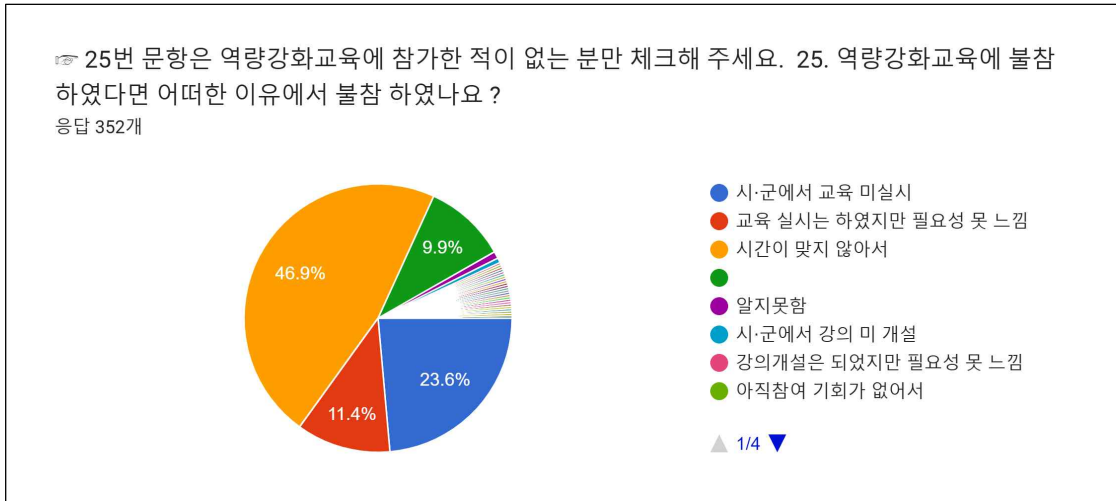
- 교육내용에 불만족한 위원 중 43.8%가 이론교육 중심의 교육, 20.7%는 강사의 전문성에 결여, 12.4%는 교육준비 미비, 10.1%는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림 12> 시·군 주민자치 교육 불만족 현황



-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에 불참한 이유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46.9%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23.6%는 시·군에서 교육이 없어서, 11.4%는 교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하였다.

<그림 13> 시·군 주민자치 교육 불참 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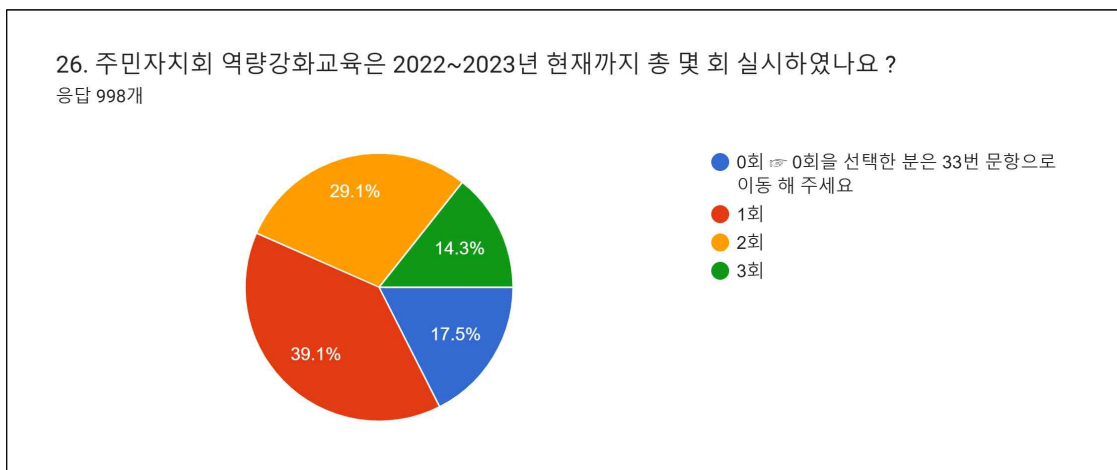
위의 응답 결과를 보면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여한 70.6%의 위원들은 91%가 교육내용에 만족하였으며 89.3%는 교육 시간도 적절하였다고 답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은 교육내용과 교육 시간에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불참한 29%의 위원들의 46.9%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23.9%는 시·군에 개설되지 않아서, 11.4%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을 하였다. 충청남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성상 농·어기와 겹치는 일정으로 교육을 받을 시기가 적절치 않았거나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아카데미교육의 정보를 접하지 못했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에서 받은 2022년 자료를 보면 시·군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한 곳이 4개 시·군, 11개 시·군은 교육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카데미교육을 운영하지 않은 시·군은 없었다. 시·군에 주민자치아카데미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2년 시·군에서 시행한 아카데미교육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5,834명 중 2,946명이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수료하여 50.4%가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23년에는 8월까지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 6,715명 중 2,644명이 수료하여 39.3%가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23년의 하반기가 남아있다고 하나 매우 저조한 교육 이수 현황

이다. 국가의 자치분권의 특별법을 기준으로 실행되는 주민자치사업이 지역 환경의 이해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교육 참가가 저조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국력 낭비이며 충청남도의 자치분권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교육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5)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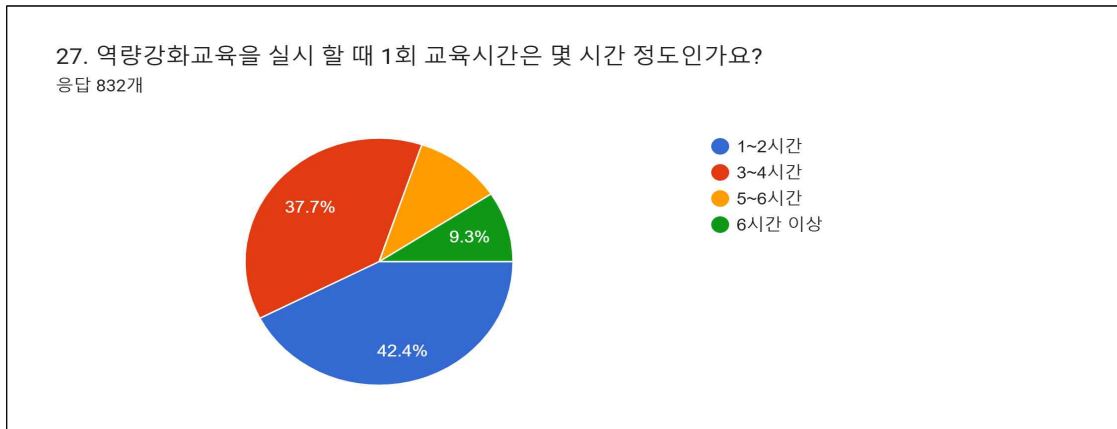
- 2022~2023년까지 읍·면·동에서 실시한 역량강화교육은 몇 회 실시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39.1%가 1회, 29.1%가 2회, 14.3%가 3회의 교육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17.5%는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일 수는 있겠으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시점이 2022년 4월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교육 빈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14>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횟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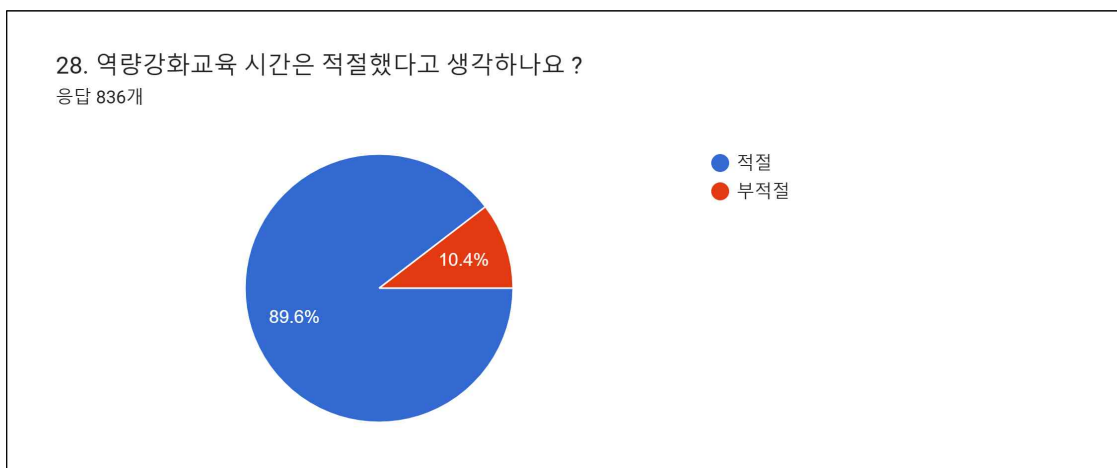
-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할 때 1회 교육 시간을 묻는 질문에 42.4%가 1~2시간, 37.7%가 3~4시간, 10.6%가 5~6시간 9.3%가 6시간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에서는 4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주민자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읍·면·동 1회 역량강화교육 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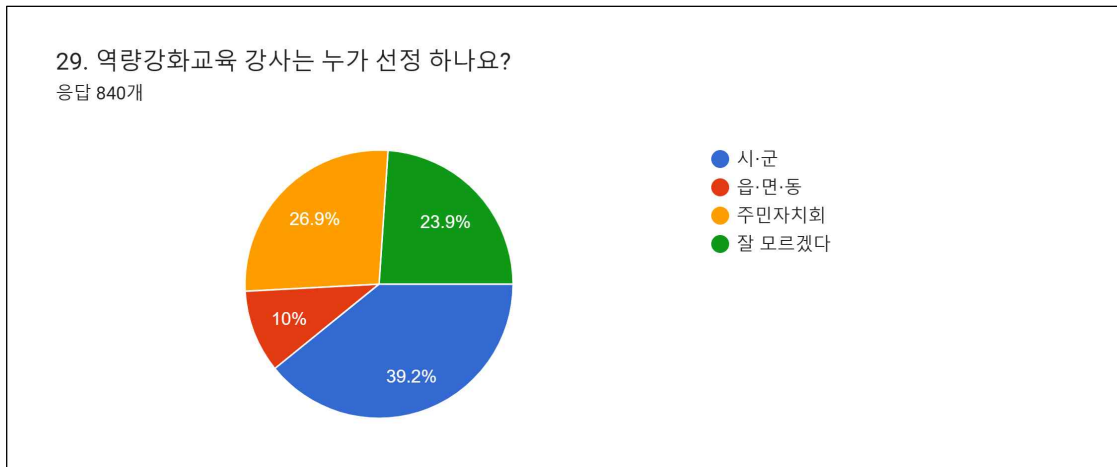
- 교육 시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89.6%가 적절했다고 답하였으며 10.4%는 부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6>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시간 만족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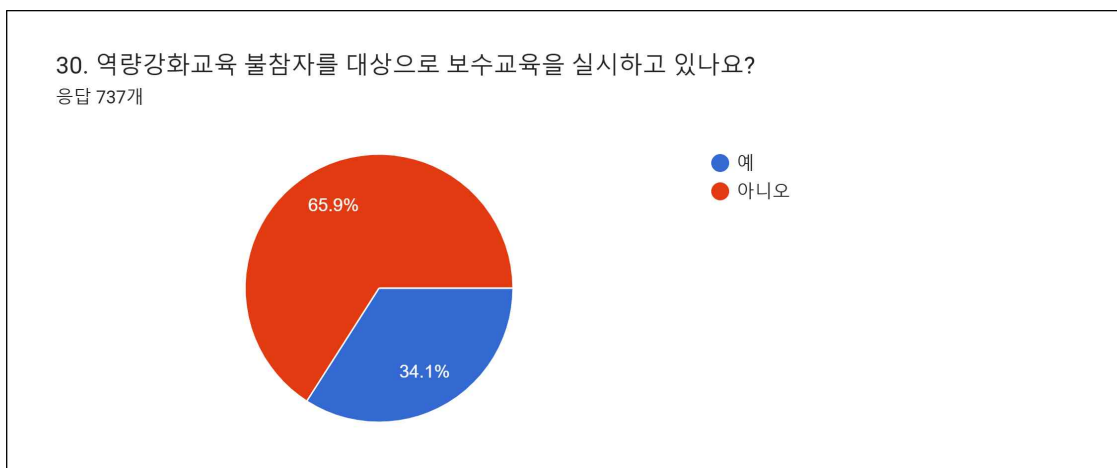
-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의 강사를 누가 선정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시·군이 39.2%, 주민자치(위원)회 26.9%, 잘 모르겠다 23.9%, 읍·면·동 10%로 응답하였다. 대부분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7>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강사 선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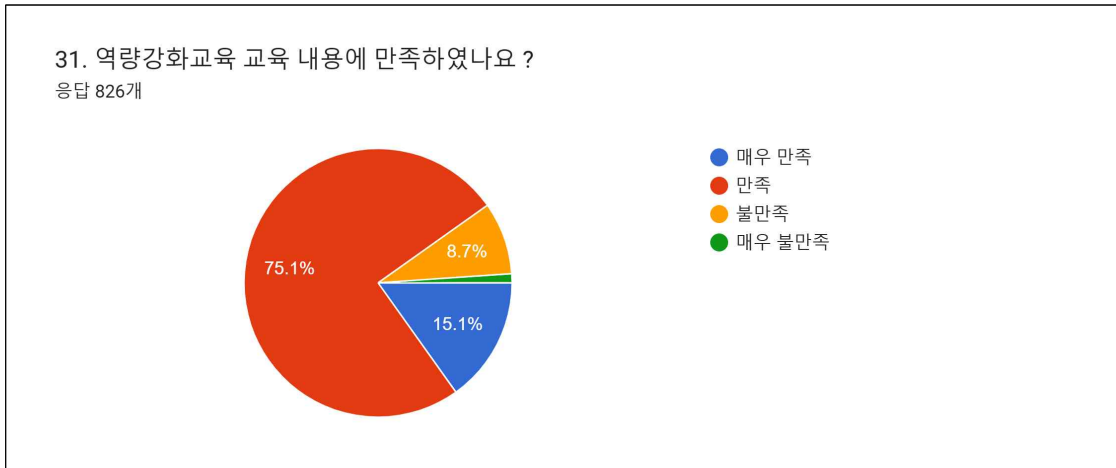
- 교육에 불참한 위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보수교육을 하지 않는다. 65.9%, 한다. 34.1%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에서는 교육 이수자와 불 이수자의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8>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불참자 보수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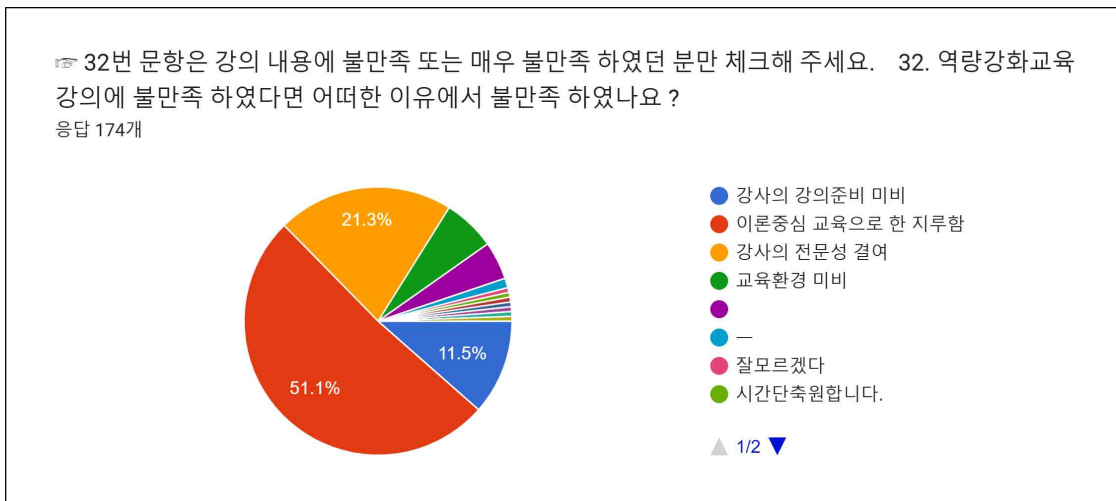
- 교육내용에 만족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15.1%, 만족 75.1%, 불만족 8.7%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교육내용에 대해선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9>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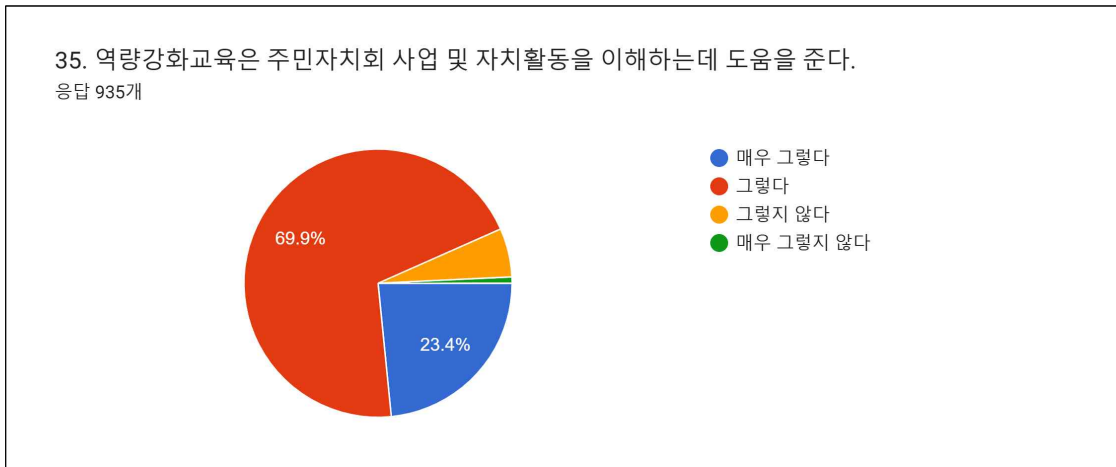
- 교육내용에 불만족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론 중심의 교육 51.1%, 강사의 전문성 결여 21.3%, 강사의 강의 준비 미비 11.5%로 응답하였다. 강사의 현장 중심이 아닌 이론 중심으로 지루함 또는 전문성 결여, 강의 준비 미비 등으로 강사의 전문성 및 자질의 미숙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0>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불만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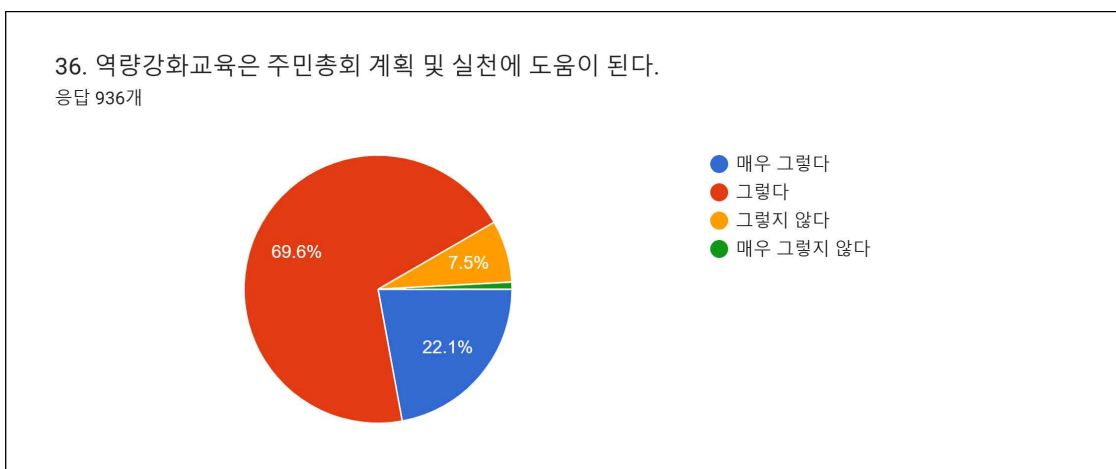
- 읍·면·동의 역량강화교육이 주민자치사업 및 활동에 도움을 주는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3.4%, 그렇다 69.9%, 그렇지 않다가 5.9%로 응답하였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은 대체로 주민자치사업 및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이 주민자치사업 및 활동에 대한 이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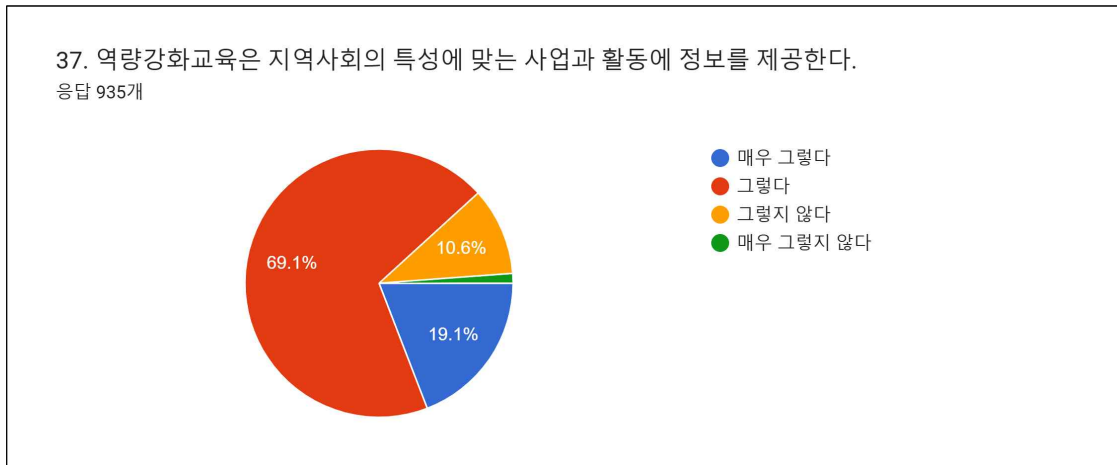
- 읍·면·동의 역량강화교육이 주민총회의 계획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2.1%, 그렇다 69.6%, 그렇지 않다가 7.5%로 응답하였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은 대체로 주민총회의 계획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이 주민총회 실천에 도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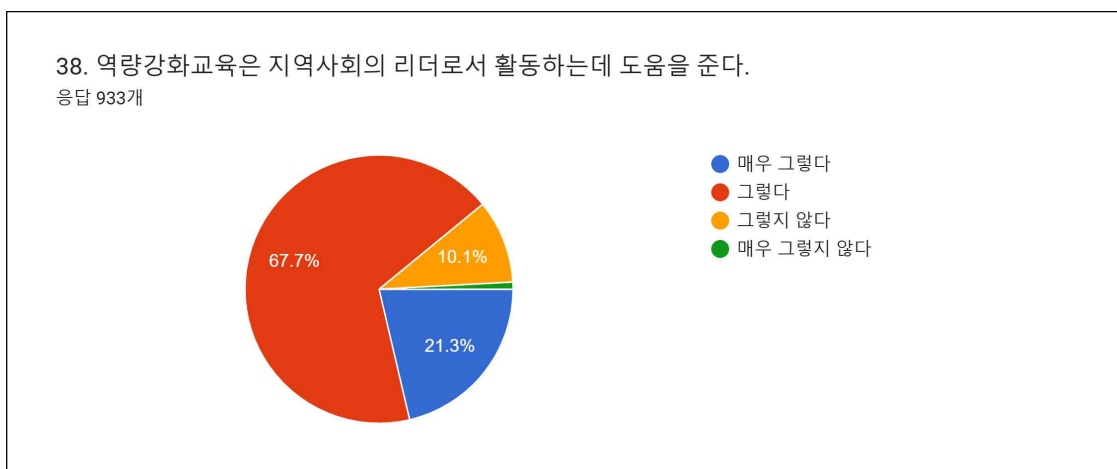
- 읍·면·동의 역량강화교육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활동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9.1%, 그렇다 69.1%, 그렇지 않다가 10.6%로 응답하였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역량 강화교육은 대체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업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활동에 정보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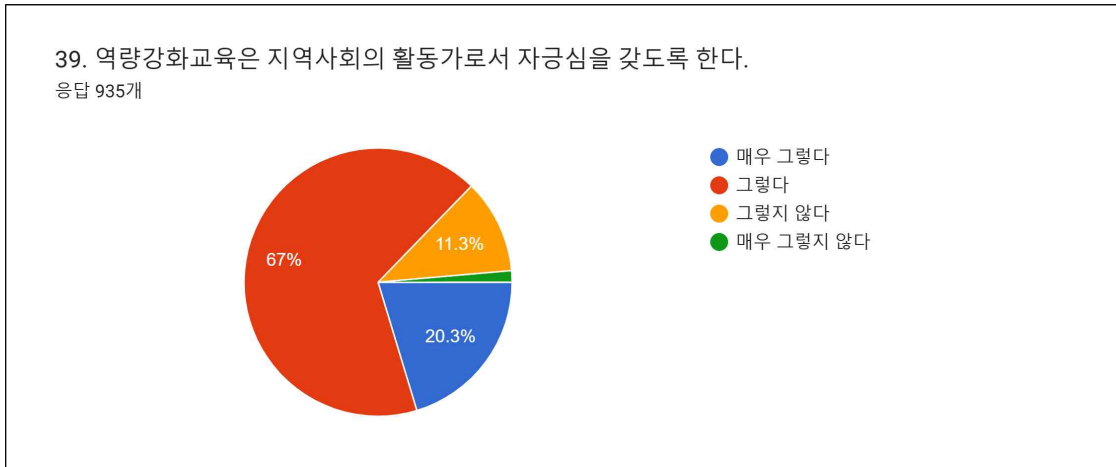
- 읍·면·동의 역량강화교육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1.3%, 그렇다 67.7%, 그렇지 않다 10.1%로 응답하였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은 대체로 지역사회리더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은 리더 활동에 도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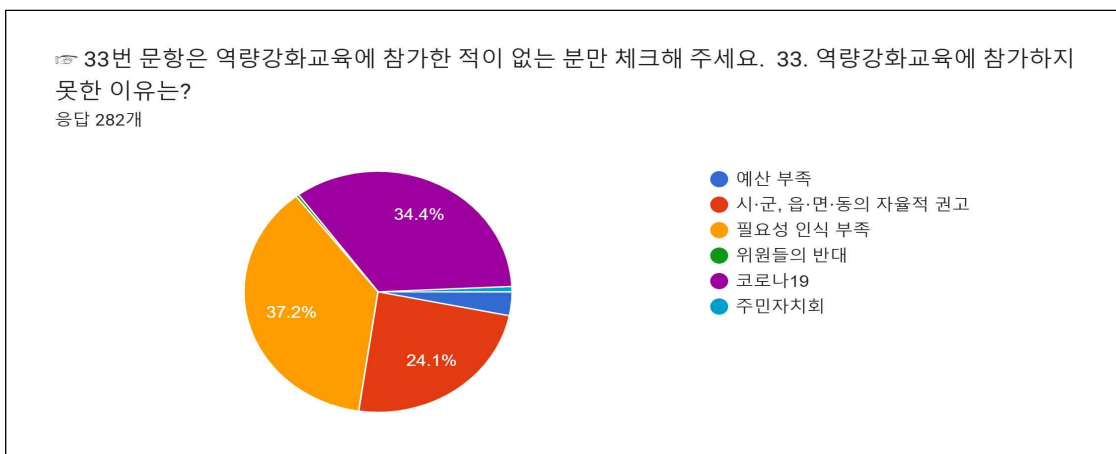
- 읍·면·동의 역량강화교육이 지역사회 활동가로 활동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0.3%, 그렇다 67%, 그렇지 않다 11.3%로 응답하였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은 대체로 지역사회 활동가로 활동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 읍·면·동 역량강화교육이 지역 활동가로서 자긍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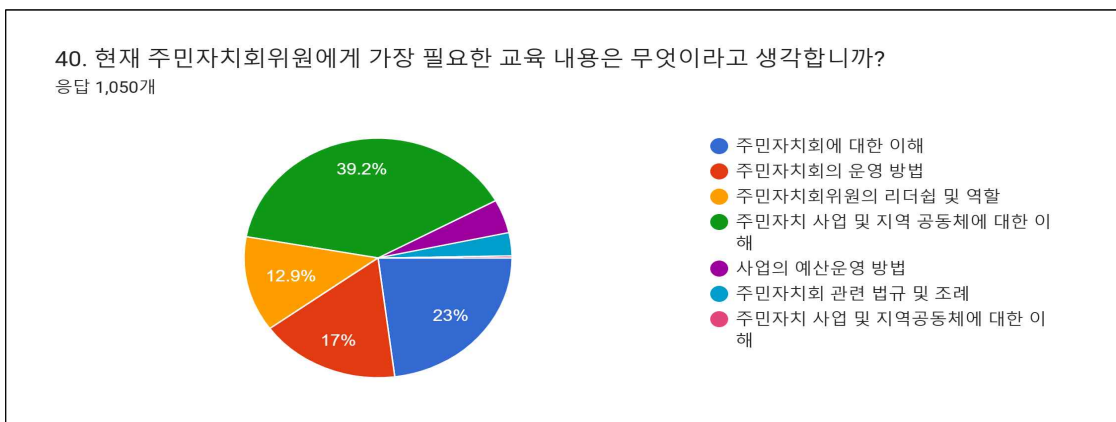
- 읍·면·동의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37.2%, 코로나의 영향 34.4%, 자율적 권고 24.1%, 예산 부족 3.2%로 응답하였다.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코로나의 영향과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교육 참가가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사회의 에너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식개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6> 읍·면·동 역량강화교육 미 참가 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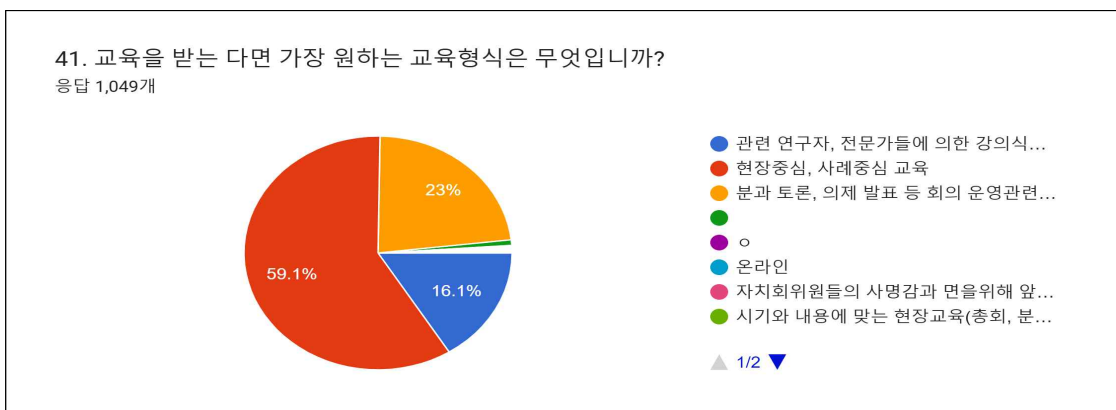
• 읍·면·동의 역량강화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주민자치사업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39.2%,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23%, 주민자치 운영 방법 17%,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 및 역할 12.9%로 응답하였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주민자치가 무엇일, 어떻게, 지역공동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자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론에 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7>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필요한 교육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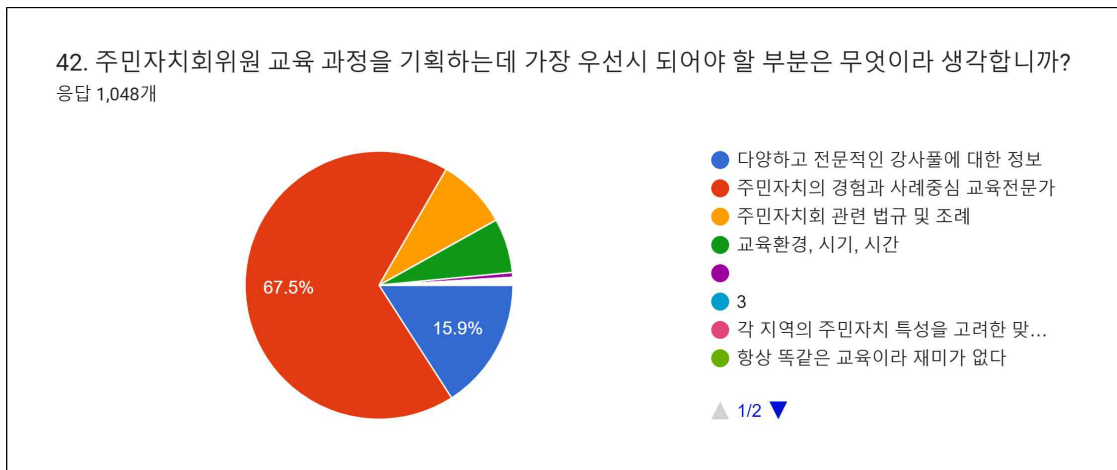
• 읍·면·동의 역량강화교육의 교육형식에 관한 질문에 현장 중심·사례 중심교육 59.1%, 분과토론, 의제 발표, 운영 관련 23%, 연구자, 전문가에 의한 강의 16.1%로 응답하였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역량 강화교육형식을 현장 중심과 사례 중심교육, 토의와 발표,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에 관하여 전문가의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8>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원하는 교육형식 현황



•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을 기획하는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주민자치의 경험과 사례 중심의 교육전문가를 섭외하는 것 67.5%,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사 풀에 대한 정보 15.9%, 주민자치 관련 법규 및 조례 8.6%, 교육환경·교육 시기 6.6% 등으로 응답하였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개설한 때 현장경험을 많이 한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는 조건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교육커리큘럼에 맞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강사 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주민자치 교육 강사의 인력풀이 그만큼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29>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에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현황



읍·면·동의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22~2023년까지 대부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17.5%는 2년 동안 한 번도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2022년 4월 18일부터 해제가 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주민자치 교육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대부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교육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교육 시간도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 사업 및 활동, 주민총회, 리더십 등, 주민자치 교육이 주민자치위원회들에게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볼 때 정기적인 주민자치 교육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린자치의식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육 불참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주민자치 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감안한다면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위원들 대부분은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의 불만과 같은 이론 중심교육과 강사의 전문성 결여를 불만족의 이유로 들고 있고, 주민자치 교육형식을 묻는 질문에도 현장 중심교육과 토론, 발표, 운영관리 등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형식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강사들의 현장 중심의 전문성 자질을 갖춘 전문 강사의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충청남도는 지역발전과 협치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자치 교육 또는 주민자치학교의 교육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의 결과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교육의 선진화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그린 자치역량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과 시·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의 현황과 인식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자치 교육의 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충청남도 주민자치 교육정책에 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온라인학교의 수강 현황과 충청남도의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 사업 현황, 그리고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 교육 현황 및 인식 현황을 모바일(SNS) 설문과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2022년 개설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1,277명(중도 포기자제외)이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총 5,834명을 감안했을 때 21.8 %만이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을 수료한 것이다. 올해 2023년은 상반기 8월까지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이수자는 1,706명(중도 포기자제외)이었고, 2023년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총 6,715명을 감안했을 때 25.4%만이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을 수료한 것이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충청남도에서 개설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참여율은 매우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 참여의식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연령과 직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연구 목적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설문 응답자 연령을 살펴보면 50세~59세가 32%, 60~69세 47.3%로, 두 연령층을 합하면 79.3%로 연령대가 높았으며 70세 이상도 8.5%로 대체로 주민자치위원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을 보면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31.5%, 상업 16.7%, 전업주부 12.3%, 자영업 9.6% 등, 전문직 직업이 아닌 직업군의 종사자가 높았다. 이것은 온라인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 때와 직업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개설하는 주민자치 교육은 온라인보다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또는 시·군의 대학과 협업(MOU)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교육의 참가자 대부분은 교육내용과 교육 시간에 만족하고 있었다.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대부분이 교육 시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교육 시간의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에 2023년과 2023년에 137,700,000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지원정책에 따라 2022년에는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총인원 중 50.4%, 2023년은 8월까지 39.3%가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23년의 하반기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나 매우 저조한 교육 이수 현황이다.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보다는 다소 높은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참가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위원 교육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은 교육내용에 만족하였으며 교육 시간도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교육 불참자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23.9%, 시·군에 개설되지 않아서 11.4%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을 하였다. 충청남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교육 일정의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시·군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보면 대부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교육 시간도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 사업 및 활동, 주민총회, 리더십 등, 주민자치 교육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조사 결과를 볼 때 정기적인 주민자치 교육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린자치의식을 높이

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불참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자 중 불만을 나타낸 참가자 대부분은 시·군의 주민자치 교육 불만과 같은 이론 중심교육과 강사의 전문성 결여를 불만족의 이유로 들고 있었고, 향후 교육에는 현장 중심교육과 토론, 발표, 운영관리 등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형식을 원하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강사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 자질을 갖춘 전문 강사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이번 연구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시·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자치 교육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충청남도의 온라인주민 자치학교와 병행한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충청남도의 시·군 교육은 충청남도의 교육비 지원을 현실에 맞도록 책정하고, 시·군에서는 이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 강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강사양성과정의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넷째, 충청남도는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매년 이를 반영한 주민자치 교육 실태를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다섯째, 시·군의 대학과 협력하여 상설 주민자치학교의 개설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전상직, 한국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천안시대 「천안형주민자치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2022,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정책토론)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료(2023)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읍·면·동과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충청남도 각 시·군, 읍·면·동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산하 20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그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주민자치회 교육과정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거)에 따라 순수하게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0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연구자

대표 도의원 이현숙

I. 인구통계학적 요인

귀하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거주지는?

- ① 천안시 ② 아산시 ③ 공주시 ④ 보령시 ⑤ 당진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서산시 ⑨ 태안군 ⑩ 홍성군 ⑪ 청양군 ⑫ 서천군
⑬ 부여군 ⑭ 금산군 ⑮ 예산군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 ① 30미만 ② 30~39 ③ 40~49 ④ 50~59 ⑤ 60~69 ⑥ 70 이상

4. 귀하의 거주 기간은?

- ① 1~3년 ② 4~6년 ③ 7~9년 ④ 10년 이상

5. 귀하의 주민자치 활동기간은?

- ① 1~3년 ② 4~6년 ③ 7~9년 ④ 10년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상업(서비스업) ③ 전문직(교사·교수·연구)
④ 회사원 ⑤ 공무원 ⑥ 전업주부 ⑦ 기타

II.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

현재 주민자치회의 기본교육 과정에 관한 귀하의 인식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세요.

자신의 견해와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충청남도 주민자치회위원 기본교육(6시간) 과정

현재 충청남도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위원 기본교육 6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충청남도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에 참가한 적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 ②없다를 선택하신 분은 13번 문항으로 이동 해 주세요.

8. 온라인교육에 참가하였다면 6시간 교육 모두 이수하셨나요?

① 모두 이수() ② 중간에 포기()

☞ 9번 문항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만 체크해 주세요.

9. 온라인교육 6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다면(중간포기) 어떠한 이유에서 이수하지 못했나요?

①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 ()
②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 10~12번까지 문항은 온라인으로 기본교육 이수하신 분만 체크해 주세요.

10. 기본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내용에 만족 하셨나요?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11. 교육강사의 교육내용 전달력과 전문성은 어떠했나요?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12. 기본교육 시간은 적절했다고 생각 하시나요?

① 적절 () ② 부적절

☞ 13번 문항은 온라인으로 기본교육에 참가한적이 없는 분만 체크해 주세요.

13. 온라인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참가하지 못 했나요?

① 온라인으로 기본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
②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③ 온라인학습을 할 줄 몰라서 ()
④ 기타 ()

□ 시·군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 위원 기본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시·군에서 실시되는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6시간)에 참가한 적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 ②없다를 선택하신 분은 19번 문항으로 이동 해 주세요.

15. 기본교육에 참가하였다면 교육시간은 몇시간 이었나요?
① 2시간() ② 3시간() ③ 4시간 ()
④ 5시간() ⑤ 6시간()

16. 기본교육시간은 적절 했다고 보시나요 ?
① 적절 () ② 부적절 ()

17. 기본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내용에 만족 하셨나요?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 18번 문항은 기본교육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셨던 분만 체크해 주세요.

18. 기본교육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였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불만족 하였나요?
① 강사의 강의준비 미비 () ② 이론중심 교육으로 인한 지루함 ()
③ 강사의 전문성 결여() ④ 교육환경 미비 ()
⑤ 기타 ()

☞ 19번 문항은 시·군에서 실시한 기본교육에 참가한적이 없는 분만 체크해 주세요.

- 19 시·군에서 실시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 하였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수를 못 하셨나요?
① 시·군에서 강의 미 개설 ()
② 강의개설은 되었지만 필요성 못 느낌 ()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기타()

□ 시·군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시·군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에 참가한 적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 ②없다를 선택하신 분은 25번 문항으로 이동 해 주세요.

21. 역량강화교육에 참가 하였다면 교육 시간은 몇 시간 이었나요?
① 2시간() ② 3시간() ③ 4시간 ()
④ 5시간() ⑤ 6시간()

22. 역량강화교육 시간은 적절 했다고 보시나요 ?
① 적절 () ② 부적절 ()

23. 역량강화교육 교육 내용에 만족 하셨나요?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24번 문항은 교육 내용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셨던 분만 체크해 주세요.

24. 역량강화교육에 불만족 하였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불만족 하였나요?

- ① 강사의 강의준비 미비 ()
 ② 이론중심 교육으로 인한 지루함 ()
 ③ 강사의 전문성 결여()
 ④ 교육환경 미비 ()
 ⑤ 기타 ()

👉 25번 문항은 역량강화교육에 참가한적이 없는 분만 체크해 주세요.

25. 역량강화교육에 불참 하였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불참 하였나요?

- ① 시·군에서 강의 미 개설 ()
 ② 강의개설은 되었지만 필요성 못 느낌 ()
 ③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④ 기타()

□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현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은 2022~2023년 현재까지 몇 회 실시 하였나요?

- ① 0회 () ② 1회 () ③ 2회 () ④ 3회 ()

☞ ① 0회를 선택하신 분은 33번 문항으로 이동 해 주세요.

27. 역량강화교육을 실시 할 때 몇 시간 정도 교육 하나요?

- ① 1~2시간 () ② 3~4시간 () ③ 5~6시간 ()
④ 6시간 이상()

28. 역량강화교육 시간은 적절 했다고 보시나요 ?

- ① 적절 () ② 부적절 ()

29. 역량강화교육 강사는 누가 선정 하나요?

- ① 시·군() ② 읍·면·동 () ③ 주민자치회 ()
④ 잘 모르겠다.

30. 역량강화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요 ()

31. 역량강화교육 교육 내용에 만족 하셨나요?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32번 문항은 강의 내용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셨던 분만 체크해 주세요.

32. 역량강화교육에 불만족 하였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불만족 하였나요?

- ① 강사의 강의준비 미비 ()
- ② 이론중심 교육으로 인한 지루함 ()
- ③ 강사의 전문성 결여()
- ④ 교육환경 미비 ()
- ⑤ 기타 ()

👉 33번 문항은 역량강화교육에 참가한적이 없는 분만 체크해 주세요.

33. 역량강화교육을 하지 못한 이유는?
 ① 예산 부족 () ② 시·군, 읍·면·동의 자율적 권고()
 ③ 필요성 인식 부족 () ④ 위원들의 반대 ()
 ⑤ 코로나19 ()

III. 역량강화교육 효과성에 관한 질문

현재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질문입니다.

👉 역량강화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한 위원님은 질의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34. 역량강화교육은 주민자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5. 역량강화교육은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6. 역량강화교육은 주민총회 계획 및 실천에 도움이 된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7. 역량강화교육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활동에 정보를 제공한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8. 역량강화교육은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9. 역량강화교육은 지역사회의 활동가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IV. 교육 운영에 관한 향후 발전 방향

40.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 ()
 - ②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법()
 - ③ 주민자치회위원 리더쉽 ()
 - ④ 주민자치 사업 및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
 - ⑤ 사업의 예산운영 방법()
 - ⑥ 주민자치회 관련 법규 및 조례 ()
41. 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원하는 교육형식은 무엇입니까?
- ① 관련 연구자, 전문가들에 의한 강의식 교육 ()
 - ② 현장중심, 사례중심 교육()
 - ③ 분과 토론, 의제 발표 등 회의 운영관련 교육 ()
 - ④ 기타()
42. 주민자치회위원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사풀에 대한 정보 ()
 - ② 주민자치의 경험과 사례중심 교육전문가 ()
 - ③ 주민자치회 관련 법규 및 조례 ()
 - ④ 교육환경, 시기, 시간()
 - ⑤ 기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장 창 석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장창석(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주민자치는 지역의 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의 현안과제를 자주적인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역대정부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중이며, 충청남도 역시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정부 중심의 이러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논쟁과 문제점 도출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시범실시에 그치고 있고, 이를 통한 지방정부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나 주민자치의 실현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과의 협력 및 공공재원 활용 등의 관 주도 마중물 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동에 공적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순수한 주민역량으로 활동을 지속시키며 자치역량을 견인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의 개최는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 교육의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주제 발표 연구 역시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운영방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민교육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적은 것과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주민자치와 주민교육은 서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부분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연구에서는 주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 정책의 내용, 정책의 주체 등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범위를 살펴보면 현재의 제도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참여율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다. 주민들을 찾아 일상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여토록 독려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역량 강화를 교육프로그램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정책과 인식전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과정의 아카데미, 대학과 협력 부분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다수의 대학교, 다양한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어 교육관련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이점을 살려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타 지역 사례로 세종자치시의 경우 주민 참여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사회적경제 공동체센터 주관의 ‘시민주권대학’,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일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을 추진중이다.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와 맞물려 특정시기나 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참여의 의식의 전환과 참여가 일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성북구는 서울형 캠퍼스 타운(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일대 지역의 부흥을 추진하는 정책) 정책을 활용하여 대학과의 연계로 인력풀을 확충하고 지역색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운영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구결과로 제안된 정책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의 교육 역량, 지식과 마을의 지혜가 모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면 이러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벤치마킹이 요구되며, 평생 교육지원 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상설 교육화하는 것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역량교육의 제공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주체를 살펴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지속성과 도, 시·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는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전환 역시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예산은 증가 중이나 집행률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충남도의 지원 이후 시·군의 적극적인 지속 운영 의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종료 후 주민자치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충남도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⁶⁾ 결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 부족,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전담인력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지원형으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성원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충남도 중심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운영지원 정책방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이며,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역량강화 방식에 시·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을 작성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주민자치회 정책은 시범실시의 지속,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중간지원조직 근거 삭제 등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는 정책의 범위, 내용, 주체에 대한 사전논의를 통하여 전환점을 맞고 있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6)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충남연구원(2022).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천안시의회 의원
이 종 만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종만(천안시의회 의원)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의 과제를 주민 참여로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민은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지향하는 목표는 쾌적하고 경제적이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주민의 힘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 사업의 단위를 넓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가 있어야 하며 이런 차별화를 위해서 지역별 주민자치회가 연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의 효과를 유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문화 교류, 예술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행사를 더 확장시켜 지역 간 경합 등 문화 교류를 통한 방법으로 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단순한 행사에서 지속적인 지역 개발 및 활성화의 일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 발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social capital)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삼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의 지식역량을 개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 지역사회 발전, 사회문제 해결, 환경보호, 문화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을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참여자로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주민자치 현장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고 실현 가능한 주민자치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개선의 효과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제안을 하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관점을 수용하여 개선을 위한 참여를 촉진합니다.

지역문제 해결 능력 강화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활발한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및 협력입니다.

지역 주민과 비영리 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의 우선순위 및 공동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은 함께 일하며 건강, 안전, 교육, 경제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하고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서산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
김 호 용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김호용(서산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

○ 2023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 현황

▶ 충청남도

- ┌ 주민자치리더 역량 강화 : 23. 3. 3.(금) 10:00~/도 대회의실 (시·군별 5명)
- └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 23. 4. 21(금) 14:00~/시 문화복지센터(위원 111명)

▶ 서산시

- ┌ 주민자치협의회리더워크숍 : 23. 6. 8.(목)~6.9.(금)/전남 목포, 순천시 일원(30명)
- └ 찾아가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 23. 5 ~ 8월중(총 12회, 매 3시간)
15개 읍면동 순회(회차별 30명 총 교육인원 400명내외)

※ 읍면동과 교육 일정을 협의하여 원하는 날짜 및 시간으로 편성함

※ 도비 지원사업 ※

- 주민자치 심화교육 : 8월 말 ~ 9월 초(총 4회/매 3시간)/50여명

○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모색

- ▶ 매년 반복되는 이론중심 교육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교육 참여도가 낮아 주민자치회 임원진에서도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특성상 주민자치위원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내용의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론 위주의 강의는 참여 의지를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 단순 이론교육에서 벗어난 사례중심 토의 및 발표 등을 통한 참여를 고취시키고, 역할극, 현장체험 등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에서의 교육 편성 운영이 필요할 것임

- ☞ 교육 추진시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가미하고 유머있고 재치있는 강사의 역량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다양하고 높아진 주민자치위원들의 욕구 충족으로 참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 이를 위하여 강사pool 부족으로 원하는 교육을 담당해 줄 역량 있는 강사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주민자치 분야의 전문 강사 양성이 시급해 보임

☞ 이와 함께 지난 4.21. 道 주관(인재개발원)으로 실시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시 서산시 관내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한 경험자를 강사로 섭외하여 2018년 충남형 자치사업시범시부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강의로 호응도가 높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전문강사가 아닌 지역의 실무형 자원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하면 상당한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듯함

☞ 또한 충남의 15개 시·군의 지역적·행정적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직접적 경험치가 높은 실무형 강사를 육성하고 상대적 특수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 **어려운 주민자치 이론과 광범위한 실무 강의로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의 초기 주민자치회로의 유입요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민·관의 꾸준한 홍보와 이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자치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자치가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 있고 분과별 과업에 따라 쉽게 녹아들 수 있는 것이라는 계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자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는 물론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횟수와 노출 빈도를 확대하여 일반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또한 온라인 교육에서부터 주민자치회에서의 **분과별 역할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함께 실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 임원(임원, 분과장, 사무국, 감사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운영**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수강할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 즉 세분화가 이루어진 필수요원(리더)의 교육프로그램

- ▶ **시·군별 제각각인 역량강화 교육 운영**, 「충남형 주민자치」만의 고유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보급을 통해 교육 상향평준화 도모
시·군별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와 비교분석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시·군별 매년 연례반복적인 교육이 시행되어 그 효율성이 떨어짐

- ☞ 시·군별 역량강화 교육내용 및 자료 수집 후 비교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차년도 상향 평준화된 교육과정 운영
- ☞ 「충남형 주민자치」 출범 이후 道 자체 또는 지원으로 시·군별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남형 주민자치」를 상징화하고 동참할 수 있는 충남만의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함
 - *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군별로 각기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 예를 들면 충남의 주요 시책 추진, 갈등 해결을 위한 자치회의 역할 등 동일 주제에 대한 시·군 순회 교육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갈등해소 역할극 등을 통해 주민 협의기능 향상과 충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 등을 생각해 보았음
- ▶ 주민자치를 위해 필연적으로 동행할 수 밖에 없는 기타 읍·면·동 자생단체와의 연계 유대 강화를 위한 자생단체 교육도 필요함
- ☞ 지역발전과 봉사, 갈등 해결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갖고 활동하는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있음. 대표적으로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다양한 봉사회, 농·어민 단체 등이 그것임
- ☞ 물론 위원 모집시 단체 추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의 회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 활성화된지 얼마되지 않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음
- ☞ 주민협의 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위해 관련 자생단체와의 합동 교육 등을 추진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음
- ☞ 아울러 소규모 공동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고 활동 의지가 있는 자생단체 등에 대한 공모 교육을 통해 차기 주민자치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주민자치의 꽃인 주민총회에 대한 인식 부족, 단순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의 일부로 생각하여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 대표적인 주민협의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 위상 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가 주민총회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 대한 일반시민은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주민총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부족함
- ☞ 주민자치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한 첫단계인 만큼 주민총회 의견수렴 절차부터 행사 진행까지 전체적인 컨설팅 교육이 필요함
- ☞ 시범단계부터 꾸준히 주민총회를 치러온 우수 자치단체의 주민총회를 선진지 견학하고 총회에도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우수사례 접목을 통한 성공적인 주민총회 개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마지막으로,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우선 새롭고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은 편이므로 딱딱한 주제만 다루기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무엇보다 참여율을 높이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임
- ☞ 주민자치 집합 교육시 건강이나 취미, 개인의 행복 등 평소 관심있고 유용한 주제를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또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함



온라인주민자치학교와 시·군별 아카데미 운영 방향

공주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
노 한 섭

온라인주민자치학교와 시·군별 아카데미 운영 방향

노한섭(공주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노한섭입니다.

우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있기까지 힘을 실어 준 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님께 주민자치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8년부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의 수료율과 운영 효과이고, 둘째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시·군별 아카데미와 공주시의 읍·면·동별 찾아가는 교육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2014년부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시군별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시·군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의 수료율과 운영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을 합쳐 6,7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5,834명의 주민자치위원 중 1,277명이 온라인교육을 수료하였고, 2023년 현재는 6,715명의 위원 중 1,706명만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약 25%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어 수료율은 대단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공공기관은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교육을 전면도입하고, 온라인 중심교육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삶의 전반 형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분야에서는 2000년 초반의 이러닝 등장 이후, 집합교육의 보조 수단 및 개선 수준에 그쳐 디지털 전환의 장점 요소인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학습자의 참여 및 몰입 저하,

콘텐츠 제작 및 확보 미흡 등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와 같이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주민자치 활동기간이 1년에서 10년이 넘는 것, 그리고 직업이 농업·어업·임업, 상업, 전업주부, 자영업, 전문직 등으로 다양한 경우에는 교육 설계 시 학습 스타일뿐만 아니라, 개인 특성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역량강화교육에서의 참여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지 않는다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주시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의 수료율이 저조한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공주시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연령대가 면 단위의 위원들은 60대, 7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50대 이하의 연령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또한 60대, 70대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컴퓨터나 핸드폰의 활용이 제한된 편이고, 핸드폰을 사용한 영상 시청이 많이 이루어지 않아 익숙치 않은 편입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김은희 팀장 등이 발표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효과 인식에 대한 집단별 학습자 특성분석’의 연구 결과 예를 들겠습니다. 세대별, 직급별 실시간 온라인 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교육이 학습자에게 번거롭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쉽게 접속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의’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을 수료하기에 취약한 연령대나 지역에서 쉽게 역량강화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수료율을 보면, 대략 25%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위원들 중 6시간을 자리에 앉아 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25%의 수료율은 진정 역량강화교육 수료를 제대로 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료한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로 하여 수강을 신청한 사람 빼고는, 대부분 영상만 틀어놓고 다른 일을 보는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강의만 틀어 놓으면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니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주는 것도 아닌데 6시간 동안 강의를 시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 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 후의 설문 도구 개발 및 인터뷰, 역량강화교육 후

모니터링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봉환 발제자님의 연구에 보면, 설문조사에서 충청남도의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교육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에 1063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자 중 72%가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7%는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포기한 이유는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가 77.8%,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가 13.1%, 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9.1%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강의만 틀어 놓으면 수강한 것으로 인정 되어 수료가 되는데 굳이 포기를 한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환 발제자님의 연구 내용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민자치 교육 설계과정에 교육 시간과 수준, 내용 등은 적절한지 꼭 참고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공공기관이 집합교육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명사특강, 토크쇼, 연극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의 수료율과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다양한 연령층, 활동 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선 면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전략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시·군별 아카데미와 공주시의 읍·면·동별 찾아가는 교육 사례입니다.

각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참여율을 보면, 2022년 5,834명 중 2,946명이 수료하여 50.4%의 수료율을 보였습니다. 2023년 8월까지 6,715명 중 2,644명이 수료하여 39.3%가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교육 수료율이 저조한 것일까요? 15개 시·군 아카데미교육 운영 방법을 보면 2022년 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였고, 11개 시군은 위탁 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교육의 형태를 보면 집체 교육으로 위탁 업체에서 교육 일정을 잡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봉사직으로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집체교육의 일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번기에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발제자님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가의 자치분권의 특별법을 기준으로 실행되는 주민자

치사업이 지역 환경 이해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교육 참가가 저조하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주 지역에서는 2023년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 시킬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주민자치의 이해와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교육을 2시간, 회계교육을 2시간 이렇게 두 번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와의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책정된 예산으로는 16개 읍·면·동에 두 번씩 32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근지역 두 개 읍·면·동을 묶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관동하고 월송동이 인근 지역이기에 주민자치의 이해와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신관동에서 실시했으면, 다음 회계 교육은 월송동에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관동에서 실시한 교육에서는 신관동 위원들의 참여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월송동 위원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월송동 교육에서는 월송동 위원들의 참여율이 좋은 반면, 신관동 위원들의 참여율은 저조하였습니다. 만약 16개 읍·면·동을 각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교육 참여율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주시에서는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회계 강사는 업체에서 선정하게 하고, 주민자치의 이해와 주민총회에 관한 강사는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오래 경험한 강사를 섭외하여 토론 형식의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들로부터 대단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론 중심의 주민자치 교육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강의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며, 공감할 수 있었기에 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내가 사는 동네를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위원들도 다르고, 필요한 사업들도 다를 것입니다. 도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필요한 주민자치, 충남에서 필요한 주민자치, 충남에서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어촌지역, 산촌지역의 주민자치는 다를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역량강화

교육은 이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에 동떨어진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에는 각 시·군별 주민자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주민자치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교육 일정이나 강사 섭외는 주민자치협회와 논의하여 읍·면·동별로 필요로 하는 강사를 섭외하여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김봉환 대표님의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정책제언에서와 같이 온라인 주민자치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시·군별 아카데미는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온라인 주민자치교육의 부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주민자치교육은 교육을 위한 학습으로 효율성 및 편의성을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부각시키고, 각 지역 주민자치협회와 논의하여 현실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남도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

충청남도 자치분권팀 팀장
송 인 호

충남도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

송인호(충청남도 자치분권팀장)

I. 도 주민자치 태동과 추진성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2023.7.10. 시행)

위 조항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근간을 규정한 법률로 풀뿌리 자치와 참여의식 고양이 주민자치의 핵심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1998년~)가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사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기능, 업무수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통해 주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자체 및 보조재원을 통해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대표기구 인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13년으로, 그해 6월 전국 38곳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자치회를 출범시켰고, 현재 전국 3495개 읍·면·동 가운데 30% 가량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2017~), 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등을 통해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2023년 7월말 기준, 도내 208개 읍면동 중 153개소(74%) 전환 완료하여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34개소/2018~2024) 지원을 통한 물리적 강화 요인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및 참여예산사업을 통한 「사업발굴 공간조성」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회 컨설팅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 등 “사업발굴-역량강화-우수사

례 확산”의 3박자가 갖추어진 결과물로 보인다.

II.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중요성과 개선과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사업발굴-역량강화-우수사례 확산”의 잘 갖춰진 충남도 주민자치 수레바퀴도 결국 사람이 굴리는 것으로, 관심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부단히 노력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직접 생산,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주체에 대한 실질적 역량강화가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볼 수 있는데, 사업 발굴과 사례확산 사업은 재원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눈에 보이는 정량적 성과가 가능하나, 역량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3년 충남도 주민자치 역량교육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주민자치회 컨설팅 △ 시군 주민자치 아카데미 △ 온라인 주민자치 학교 △ 인재개발원 도민참여교육으로 구성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지원」 및 「시군별 특색에 맞는 아카데미」, 「주민자치 기초-심화이론 과정」을 교육하고, 수요자 편의를 위한 「대면-비대면 양방향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상반기 기준, △ 읍면동 컨설팅 희망 주민자치회 12개소 집중육성 △ 주민자치아카데미 총 71회 2,644명 수료 △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총 1,706명 수료 △ 시·군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도민참여교육을 실시 하였고 시군별 자체 역량교육(천안형 마중물 컨설팅, 공주 학습모임 지원, 보령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등)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도의회에서 발주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 설문자료⁷⁾를 보면, 도-시군 주민자치 교육내용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는 약 90% 이상으로 긍정적 답변이 많았으나, 불만족한 위원 중 43.8%가 이론교육 중심의 교육, 20.7%가 강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교육 불참이유로는 온라인교육은 59.3%가 온라인이 불편해서와 현장교육은 46.9%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출처 :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충청남도의회, NPL연구소 김봉환 대표)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교육이 가능한 읍면동 단위의 역량강화교육 미 실시 지역이 17.5%가 되는 등 교육빈도가 낮은 점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이수 자율화(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 '23.5.15.) 등 교육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여건에서 주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읍면동 자체 역량강화 활성화 등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강화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 하겠다.

Ⅲ.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2013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충남도에서는 도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전환율 74%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로 성장을 이뤄냈다.

앞으로 충남도 주민자치가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실질적 주민자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역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바, 도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본다.

의제1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역량이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자치 법제화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주민자치회 사무가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게 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주민세(개인균등분)가 보통세에 해당하여 일반 지출에 충당 중으로, 납세자와 직접적인 수혜자가 일치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통해 목적세화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형개선이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군별 운영세칙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금년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를 통해 읍면동별 지역특성(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등)에 맞는 분과위원회 모형구축을 연구 중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 등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현재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모임 지원사업도 참고할 만 하겠다.

의제2 : 주민자치회 역량교육 수요자 만족도가 제고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대상과 무슨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정이다. 교육 수요자를 수행 역할에 따라 나뉘보면 크게 주민자치위원(주민),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각각 역할에 있어 교집합 부분과 고유역할이 구분되나, 현재 대부분 교육이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 시, 합동교육하는 형태로 담당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체계를 감안할 때 인재개발원, 시군 아카데미 등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주민자치 직무교육 편성을 고려할 만 하다.

둘째, 교육 만족도 제고이다.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하다. 실제 교육현장의 불만족 의견을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만 반복해 지루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주민자치위원 경험과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방안으로 금년도 역량교육 운영지침을 통해 사전계획 수립 시 주민욕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운영 시 지역 주민자치리더(강사) 활용 현장교육과 교육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실적 보고 활용 및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 강사 질 제고이다. 흔히 교육에 관한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 할 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지 못한다’ 는 문구를 곧잘 인용한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에서 주민자치 강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주민자치 이론은 대부분 행정학 총론 중 지방자치론에서 파생한 개념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요소로써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자치 인적 Pool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의 법제화와 현장에서의 주민자치 활동가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전문이론 강의는 주민자치 관련 정규교육 등을 이수한 전문가를 통하고, 주민자치 활동가는 현장성과 주민자치 위원과의 공감대를 토대로 현장의 자료나 사례 등을 통한 지역사례 발굴, 극복과정, 성과 강의 등 강점을 살려 교육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서는 매년 주민자치한마당 등을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활동가들이 지역의 우수사례를 소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의제3 : 주민께 신뢰받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떤 역할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고 해도 정책변화 등에 대한 행정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중립

성과 주민들의 자치회나 위원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의 재정지원 의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본질적 의미는 변함이 없고,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의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 유관단체,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보조금 및 자체 운영비 등 활용 시, 외유성 행사자제 및 보조금 법령기준 준수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등 역량강화로 주민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는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등 통해 주민자치위원, 주민과 함께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

끝으로, 도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현숙 도의원님과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김봉환 NLP연구소 대표님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